

여야 대표회담 의제조율 이견...내달초로 늦춰질듯

양측, 대화록 수사 "검찰" "특검" 맞서

NLL 발언·국정원 개혁방안도 시각차

소모적 정쟁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을 종식 하자는 공감대 속에 갖기로 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회담이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담을 위해 물밑 조율에 들어갔으나 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때문이다. 양 대표 측은 지난 주말 실무진 접

촉을 통해 회담 의제를 주고받은 데 이어 이날 양당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정쟁을 중단하자'는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입장이지

만 민주당은 '공정성 있는 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종결 방식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실종된 대화록과 관계없이 정상회담 사전·사후 부속자료 열람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속자료와 함께 국가정보원 음원파일도 동시에 열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강령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황우여 대표가 지난 27일 관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 양당 대표회담을 열

자"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방안 확보 ▲NLL 대화록 논란 종식을 위해 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록 열람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논의 등 3가지 의제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최근 현안을 주도해 온 "매과"를 중심으로 민주당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 임무를 고수하면서, 사전·사후 부속 서류 열람 시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문했고, 국정원도 이에 따르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 주제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날 중 회담 의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담 일정 자체가 내달 5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 대표가 원만한 대야(對野)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치하하기 불구 '민생쟁기기' 고삐 죄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말과 8월초에도 민생 쟁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과 함께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내리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고달파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 이 있어야 할 때에 침묵을 계속 이어가다가 휴가를 가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활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대표실에서 주최한 서울·대전·대구·경남 지역 대의원

전 기사 피해사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공적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약관심사청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별로 책임위원을 배정, 자율협약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하고 있다. 이미 '밀어내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과 배삼면주가를 비롯한 7개 사업장에서 상생협약이 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잔뜩 고무돼 있다. 민주당은 전날 남양유업 타결 보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편의점 '미니스토' 분사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1차 교섭을 추진한다. 30일에는 CJ제일제당과 대리점주들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뒤 협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브리핑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與 지도부도 반대 많아

박대통령 대선공약 당론 확정 주목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확정과 달리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당 소속 의원들의 전반적 분위기도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정 최고위원회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 내에도 반대가 많다"며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선불리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황우여 대표만이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반대세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제를 포기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 때문에 현역이나 지역 토호 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부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없다"며 "그 경우 못 이기는 척하고 민주당 공약을 대면서 공천 폐지 여부 결정을 유보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의 공약인 뿐 아니라 당 정치쇄신특위에서도 제안한 사안을 거부하기엔 당 지도부가 안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일 반적 지적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당 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오른쪽)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9일 오후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후 함께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증인채택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커 이날 증인·참고인을 모두 결정짓기는 어려워 간사회의에 위임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국제대회 '문지마 유치' 제동

당정, 3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재정평가 실시 등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 지자체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는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대회 유치시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제6정주위원장인 김희정의

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경기장 등 직접 시설만 지원하고 기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300억원 미만의 국제대회의 경우, 정부 훈령으로 관리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회유치 타당성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연구원의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서류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재개된 국정원국조 특위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날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 활동을 재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국조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8월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며 7~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휘국 "후보 단일화 경선 참여하겠다"

내년 광주교육감 선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지역 일부 교육단체들이 추진 중인 후보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국교육원노동조합(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단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교조를 중심으로 둔 교육단체는 참교육회 부모회·교육희망네트워크 등으로 이들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해 광주지역 일부 교육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국조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8월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며 7~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해 현직인 장 교육감에 대한 평가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장 교육감에 대한 평가작업을 토대로 현 교육감을 다음 선거에서도 후보로 내세울지 아니면 경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후보로 결정할 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인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일단 공과를 평가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 | |
|---|--|
| 지하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3층, 4층 시네마 분양완료
CGV 영화관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 | |
|--|--|
|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
|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
|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
| 지상1층 지상1층 현대문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
|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 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
|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
|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 지상 3층~4층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
|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암8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